

국가 정책적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령이 정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

<보도내용>

- 2026.9.6. 매일경제는 「국책사업 속도전에…예타면제 벌써 13.5조」 기사에서,
 - 정부 재량의 ‘국가 정책적 예타면제’가 ‘균형발전·긴급상황 대응’ 등 추상적 면제사유로 인해 남발되고 있으며, 올해 대형 국책사업을 포함한 면제 규모가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- 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(이하 ‘예타’)의 구체적 면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예타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 -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(10호 면제)의 경우 부처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,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추진 필요성과 예타 면제를 심의·의결 하도록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아울러, 10호 면제가 확정된 사업은 ‘사업계획 적정성 검토’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, 적정한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.
- 앞으로도 정부는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 재정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타당성심사과	책임자	과 장	강미자 (044-214-3310)
		담당자	사무관	최현화 (hyunhwa@korea.kr)